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해야

가축분뇨 해양배출 오히려 증가세

올해 들어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한편 정부에서 꾸준히 폐기물 해양 배출량 감축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에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앞서 양돈농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 가축분뇨 해투 증가 지속

최근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에 따르면, 매년 10%씩 증가하던 폐기물 해양투기량은 전년대비 9.7%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오히려 올해 상반기 131만2천m³로 지난해 상반기 123만4천m³보다 6.3%인 7만7,839m³나 증가했다.

가축분뇨는 이처럼 7만8천여m³나 증가해 전체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율(29%)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마산, 인천, 포항의 배출량이 가장 많았고 작년과 비교해 증가한 비율은 울산 51%, 목포 46%, 마산 36%, 여수 20% 순으로 높았다.

● 축분뇨 해양배출 비용은 크게 상승

한편 축산농가의 폐기물 위탁업체 수는 3천165 개소로 지난해보다 17개소 감소했다. 해경은 이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억제정책 및 위탁처리 신고의 엄격한 심사로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특히 축산농가에서의 업체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 방침 이후 대부분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 배출 비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려 전년대비 2배이상 오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양돈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비용 인상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참가자 1백61명 가운데 87.6%(1백41명)가 “전년보다 올랐다”고 대답했다. 반면 전년과 동일하다는 농가는 12.4%(20명)에 불과했다.

인상폭을 살펴보면 해양배출 비용이 지난해와 비교해 ‘10~30% 상승했다’는 대답이 66명(41%)으로 가장 많았으며 ‘30~50%’가 39명(24.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해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 방침을 계기로 배출업체들의 일방적인 가축분뇨 처리비용 인상이나 중단에 따른 여파로 풀이되고 있다. 양돈